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이 재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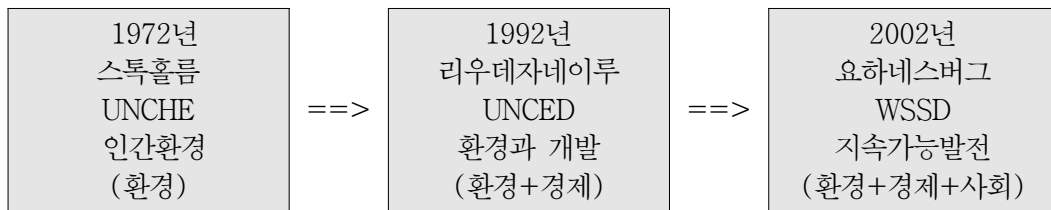
(협성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
1. 서론
 2. 시민참여 발전과정 및 추진현황
 3.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개념과 참여원칙
 4.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요건
 5.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조직구성과 운영
-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1. 서론

21세기를 맞이하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¹⁾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구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이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그 이념을 실천하고자 정주생활기반의 최소단위인 마을을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와 협력방식인 거버넌스 체제(governance system)의 상향식 지속가능한 발전의 형태로 전방위에 걸친 발상의 전환과 개혁이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는 리우회의(1992)와 요하네스버그회의(2002) 등의 국제정상회의와 각종 국제환경협약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림 1>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 전개 과정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해 삶의 터전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실천적인 방법으로서의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가장 기초단위인 마을에서부터 시민 스스로가 도시와 마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시민교육과 시민역량의 증대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선자치시대가 확고한 뿌리를 내림에 따라 민주주의의 정치철학의 핵심적인 사회원리인 시민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행정당국과 계획가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하향식의 도시정책 수립과 관리방식은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제도상의 시민

1)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극대화하는 개발”로 지구상의 자원의 한계가 분명해진 현 상황에서 환경이 지탱할 수 있도록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참여는 공청회, 공고·공람, 위원회 등 제한적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는 형식적이고 통과의례로 시민참여 본래 취지와 의도에 부합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의사결정체제가 필요하며, 시민참여 방법의 다양화, 참여과정의 민주화 등 도시정책 수립과 관리방식에서 바람직한 계획수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강의자료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도시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시민참여 발전과정 및 추진현황

1) 시민참여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 시민참여는 1960년대 현상공모를 통해 입상작품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안을 확정·시행한 울산도시계획안이 도입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건축법(1961), 도시계획법(1962),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이 제정되고 1971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현대 도시계획 개념이 정립되는 사이에도 시민참여에 대한 제도는 조성되지 않았다. 1981년 도시계획 입안과 심의과정에서 공람과 의견서 제출, 공청회 개최가 가능토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주민홍보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시민참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1991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상세계획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으며, 1995년에는 민간에게도 도시계획입안의 제안권이 부여되고 도시계획초안에 대한 공람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변경 및 수립에 관하여 주민제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단순한 의견청취를 통한 시민참여에서 진일보한 형태로 주민제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와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수립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관리계

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와 그 의견이 인정되는 때에는 계획에 반영하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적인 주민의견청취를 유도하였다.

<표 1> 시민참여 관련 제도 변화

구 분		관련 제도	시민 참여	비고
행정주도	일제강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의 확충 및 시가지정리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공포 •가로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민간의 권익 무시로 주민참여가 불가능함	-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1961) •도시계획법(1962)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울산도시계획안의 현상공모를 통해 원시적 시민참여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 확정 •개발제한구역 도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도시계획법 전문개정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개발예정지구 신설 	•도시계획법 개정되었으나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지 않음	
시민참여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 확정 •성장거점도시 육성 •도시계획법 개정 	•공청회 개최와 도시계획 입안시 공람과 의견서 제출 가능	도입기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 확정 •수도권견제기능의 강화 및 중소도시의 경쟁력 제고 •도시계획법 개정 	•주민에게 도시계획입안의 제안권을 부여되며 도시계획초안에 대해 공람 가능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 확정 •수도권 분산과 계획적 정비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의 추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변경, 수립에 주민제안제도 도입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청취 •조례 제정시 주민발의를 통해 참여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정비기
시민주도	2010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주도의 마을계획수립 후 도시계획반영 제도 도입 •시민참여 관련제도의 적극적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개발과 보전을 갈등예방 제도 마련 •시민참여 지원센터 설립, 조례제정, 담당조직 구성 도입 	정착기

2000년 3월 지방자치법에 주민발의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제한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적인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제정에 주민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2) 시민참여 추진현황

도시개발과정에서 시민참여 방법은 크게 입안, 결정, 시행 단계 등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입안단계는 지자체와 의회 의견청취,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가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결정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공람·공고가 있으며, 시행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소유주 동의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계별 시민참여 수준을 평가하면 상대적으로 입안 단계에서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많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참여주체 측면에서 결정력 있는 참여주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소유주 동의, 지자체 인허가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문가 또는 지역 내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유주 이외 일반시민은 공람·공고, 공청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 참여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참여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방법 측면에서 공람·공고 공청회가 의무화되어 ‘정보제공’은 제도적 수준이 높은 편이나, 양방향 참여방법이나 지속적 참여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2>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시민참여

구분	입안 단계	결정 단계	시행 단계	권 한
지자체	지자체(의회) 의견청취			지정·승인·수립 권
전문가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공람·공고		의견제시
소유주	"	"	소유주 동의 또는 통보	거부권 (일부)
기타	광역도시계획 협의회(필요시)			

3.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개념과 참여원칙

1) 시민참여 마을만들기 개념 및 주체

(1) 개념정의

① 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형태와 기능에서 부터 극히 전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의적인 개념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시민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 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민참여의 방식은 크게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의 수립과 같은 공적인 계획 입안에서 부터 사업집행, 그리고 다수의 개인이 건축과정에 참여하는 직접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방식이 있을 수 있다.

② 마을만들기의 개념

‘마을만들기’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참여와 지자체와의 협력, 그리고 지역성의 고려하는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을 뜻하는 개념으로 ’80년대부터 발전한 일본의 ‘마찌즈꾸리’가 ’90년대 후반에 국내에 소개되면서 ‘마을가꾸기’ 혹은 ‘마을만들기’ 등으로 정착된 용어이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는 추상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성주체

시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참여 주체는 크게 ① 지역시민, ② 지방자치단체, ③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다. 각 주체들의 참여수준과 형태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시민참여단계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같은 유형이라도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① 지역시민

마을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역시민이다. 지역시민은 마을만들기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비물리적 지역환경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전문가나 외부인이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해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지속적인 지역사회운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시민은 마을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② 지방정부(행정)

지방정부는 마을만들기의 지원자이면서 또 하나의 주체이다. 마을만들기는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지역시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율적인 활동조직 구성을 유도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과 행·재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단체 및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집단은 마을만들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만들기에서 시민과 행정이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행정의 편의 및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과 시민생활의 편의와 개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지역간 마찰이나 집단간의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할 경우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중립적이고도 전문적인 시각으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문제해결에 관한 대안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2> 시민참여 주체 및 역할



2) 시민참여 마을만들기 기본이념 및 참여 원칙

마을만들기는 공동의 공간, 시설, 시스템, 서비스, 이벤트, 문화 등 공동의 장을 시민이 공동으로 만들어 내는 총체적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는 이러한 공동의 장을 만들고 움직여 가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이념과 참여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갈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기본이념

- ① 총체성 : 마을은 각각이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하나이다.
- ② 시스템 : 마을은 복잡한 요소가 서로 얽혀서 관계를 맺고 있다.
- ③ 공유환경 : 마을은 시민이 공유하는 공간이며 환경이다.
- ④ 시민공용·공익 : 마을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시민전체의 이용과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다.
- ⑤ 시민공존·공생 : 마을은 다수의 이질적인 사람이 모순을 지니면서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생활하는 장이다.
- ⑥ 시민협동·공동책임 : 마을은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시민의 공동작업에 의해 공동의 책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 ⑦ 시민공감·공동애정 : 마을은 시민들이 공통된 자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⑧ 상호교류 : 마을은 시민들끼리는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과 외국인도 포함한 교류의 장이다.
- ⑨ 내발성(내발성) : 마을은 밖으로부터의 강요가 아니라 시민과 지자체의 안으로부터 비롯되는 자발적 발상과 행동을 주력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2) 마을만들기 참여 원칙

- ① 모든 참여자들의 견해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성공적인 협의의 기초이다.
- ② 협의결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또는 협의결과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들을 가능한 한 협의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어떤 참여자는 협의과정에 요구되는 자원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거나 재정지원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 ④ 토의 안건 및 일정은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쟁점, 목표, 한계 및 예상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사전 이해가 있어야 한다.
- ⑤ 협의결과가 사전에 정해져서는 안 된다.
- ⑥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의과정이 개방되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고 목적 및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 ⑦ 참여자들은 위임범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 ⑧ 모든 참여자들은 관련 정보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⑨ 협의과정에서 반드시 합의에 도달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는 있어야 한다.
- ⑩ 참여자들은 합의된 사항을 실천하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4.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요건

1) 주체별 역량강화와 시너지 제고

(1) 자발적 시민의식과 공감대 형성

시민의 의식변화와 자발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의미의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는 실천될 수 없으므로 우선 시민들의 의식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변화를 수용하여 주체적인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체들 간의 의식 공유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연대감은 애착심, 자부심, 소속감 등으로 발전하여 마을과 지역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지역공동체가 인식하는 현안과 제로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호응과 적극적 참여를 유발할 수 있다.

(2) 추진팀 구성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전담조직 설치와 운영이 중요하다. 특성에 따라 지자체조직, 민간조직, 민관협력조직 등의 유형이 있으며,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시너지(synergy)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 필요성이 있으며 기초지자체 차원의 공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필요하다.

(3) 리더발굴과 양성

마을만들기 현장리더는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단체, 개인활동가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봉사형 민간리더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시민주도의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만들기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봉사형 지도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격적 인사가 현장리더로 선정되도록 한다. 둘째, 마을만들기 현장리더의 발굴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리더 발굴을 위한 노력보다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분야의 리더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발굴된 리더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시키고 유사한 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역의 리더와 공유하도록 한다. 넷째, 리더의 발굴과 육성뿐만 아니라 리더의 활동을 전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리더그룹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교육·연수 및 평생학습체제

지역시민의 요구에 기초하고 그 결과를 지역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상향적 접근(bottom-up) 방식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학습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갖는 관심과 자부심 및 애착은 건전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 및 평생학습체제는 시민들의 학습활동, 예술·문화활동, 스포츠 활동 등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킨다. 또한 시민들간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의식의 향상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의 기반형성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2) 민·관협력 파트너쉽과 상향식 접근

(1) 전문가 역할과 컨설팅

도시 또는 마을단위 차원에서 세련되고 높은 수준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거나 진행할 경우 마을만들기 초기단계에서는 의식있는 주민과 현장리더의 역할이 가장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 도움이 중요하다. 전문가는 주민과의 상호학습과정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사업구상, 계획수립과 관련된 이슈점검, 전략도출, 계획수립 등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충실히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실을 감안할 때 일차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위한 적합한 전문가로 지자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준전문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주체별 역할정립 및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주민과 상호협력의 토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모색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자체는 지역시민과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협의기구 구성 지원과 정책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전문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부갈등을 중재하며 지역시민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만들기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민관 협력 파트너쉽 모델과 적용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자체, 중앙정부가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역할을 상호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은 주도적 참여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활동을 기획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요구사항

을 반영시킨다. 지자체는 지역시민,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정부는 법·제도·정책·행정직으로 지원하고 관련부처간 정책조정 및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시민 자율적 주도와 상향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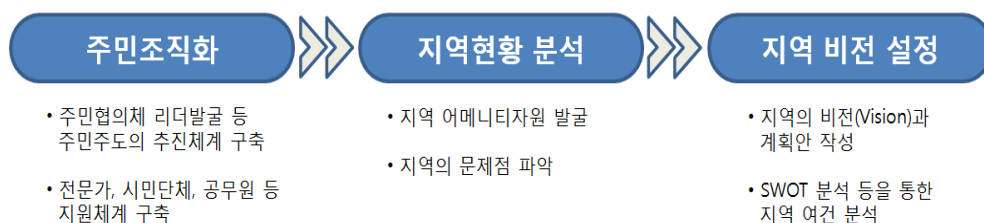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전체 과정에 지역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며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주도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을만들기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지역시민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전과 실천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상향식 시민참여의 실천과 방법

(1) 마을만들기 구상 및 기획과 목표설정

지역의 미래 모습을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마을만들기 구상 및 기획과 목표설정이 중요하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행정,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성과 행정적인 지원은 상향식 시민주도형 마을만들기 구상과 목표설정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상향식 시민주도형 마을만들기 구상 및 목표 설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민조직화, 자연현황분석, 지역발전과 계획안작성의 3단계의 추진과정을 갖는다.

첫째, 시민조직화 단계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커뮤니티 단위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의무 등에 대한 논의의 단계이다. 둘째, 지역현황 분석 단계는 지역의 현재 문제점과 위협요소, 지역 어메니티자원 등 지역의 장점 및 기회요소를 찾는 단계이다. 셋째, 지역발전(vision)과 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는 SWOT 분석 등을 통해 지역의 장점과 단점, 위협 및 기회요소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그림 3> 시민참여 마을만들기 구상 및 목표설정 절차

<표 3> 단계별 시민참여 방법(예시)

주민참여 방법		내 용
주민 조직화 단계	활동주간(Activity week)	■ 한 주를 지정하여 특정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참여 유도
	설명 워크숍 (Briefing workshop)	■ 적절한 설명을 통해 사업 방향 설정 및 참여 동기 부여
	지역 탐구 (Community profiling)	■ 도면화 작업을 통해 마을의 현실 및 문제점 확인
	마을 계획 사무소 설치 (Neighbourhood planning office)	■ 전문사항 및 협의장소 등 교류를 위한 장소 제공 공동계획의 요점 제공
	참여자 모임(User group)	■ 커뮤니티 계획의 중요 요소이며, 사업에 전개하는 주체인 사용자 그룹의 유지와 관리
지역현 황분석 (어메니 타자원 발굴) 단계	다이어그램(Diagrams)	■ 다이어그램차트를 활용하여 복잡한 이슈 및 방법을 간단하게 표현, 주민의 이해를 쉽게 함
	몽타주(Elevation montage)	■ 사진을 나열하여 이어붙인 것으로 마을건물구조와 현재 상황을 이해하도록 함
	아이디어 경쟁 (Idea competition)	■ 아이디어 경쟁을 통해 창조적인 생각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
	지역지도 만들기(Mapping)	■ 주민들이 직접 도구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마을 이해 내용을 알아보는 효과적임
	사진조사(Photo survey)	■ 마을현황과악과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액션 플랜 수립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음
	답사여행 (Reconnaissance trip)	■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을 조사
	마을 해설	■ 마을을 전문가나 외부인과 함께 돌면서 지역주민이 직접 소개하고 장소를 해설
비전과 계획안 작성단 계	우수자원 주민투표	■ 마을의 자원을 나열한 후에 지역주민이 선정하는 우수자원을 투표를 통해 선정
	모형 만들기(Models)	■ 모형을 통해 계획과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
	마을계획포럼 (Community planning forum)	■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디자인 페스티벌 (Design festival)	■ 마을을 개발하려는 디자인 팀들이 마을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전시하는 행사
	미래연구회의	■ 커뮤니티 멤버들과 개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며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세부계획 워크숍 (Design workshop)	■ 개발계획을 만들거나 거주를 향상시키는 계획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의
	길거리 전시회(Road show)	■ 전문 워크숍, 전시회, 심포지엄을 결합한 형태
	길거리 조사(Street small)	■ 사람들이 많은 거리나 공공장소에 계획 내용을 게시하여 행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실내 기획 전시 (Table scheme display)	■ 기획안의 모형에 주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 방법

(2) 지역자원 발굴 및 사례 조사

지역자원²⁾ 발굴에 지역시민의 참여는 효율적인 자원발굴과 함께 전문가와 행정은 워크숍이나 주민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지역자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부여될 때 더욱 큰 가치가 부여된다. 지역자원의 발굴은 다음과 같이 예비조사단계, 조사계획단계, 본 조사단계, 인벤토리작성단계, 자원활용모색단계의 5개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각종 문헌과 인터넷,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자원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특성에 맞게 자원을 분류한다. 둘째, 조사계획단계에서는 조사일정과 조사방법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면접, 관찰, 시험 등 본격적인 지역자원 조사를 계획한다. 셋째, 본 조사단계에서는 보통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마을사람들과 면담을 통한 면접조사, 사진 등을 활용한 관찰조사, 음이온 및 수질 측정 등 간단한 실험조사 등을 직접 조사한다. 넷째, 인벤토리작성단계는 예비조사, 본 조사 등을 통해 조사된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로 분류체계, 특성, 현황 등으로 나누어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다섯째, 자원활용모색단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자원을 직접상품화, 공연, 문화컨텐츠로 활용, 신사업 개발 등과 같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그림 4> 지역자원의 발굴 및 활용 과정

2) 지역자원은 지역의 사회적 상황과 외부적 수요에 의한 외부경제의 형태로 유무형 자원 일체를 지칭하며 지역 고유의 장소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에게 긍정적인 감성과 인식을 불러 일으키는 환경적 속성을 의미함

(3) 지역브랜드와 마케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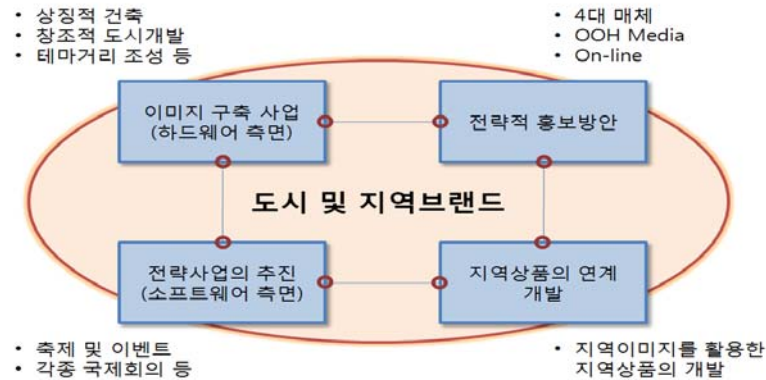
지역의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자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브랜드는 그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된 강력한 지역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 내부의 강점, 약점, 외부환경의 기회, 위협요소의 SWOT 분석을 토대로 한 자원의 평가는 핵심 이슈의 파악과 지역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지역브랜드를 통한 마케팅 전략은 ‘지역현황 및 자원조사’, ‘SWOT 분석’, ‘지역이미지 방향 설정’, ‘브랜드 개발’, ‘브랜드 강화전략’의 5개 단계로 실천할 수 있다.



<그림 5> 지역브랜드 활용을 통한 지역마케팅 전략의 전개

또한 지역브랜드 강화를 위한 전략은 하나의 통합마케팅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이미지 구축사업(하드웨어 측면)’, ‘전략사업의 추진(소프트웨어 측면)’, ‘전략적 홍보방안’, ‘지역상품의 연계 개발’ 등이 있다.

첫째, 이미지 구축사업의 추진은 지역브랜드와 관련된 상징적인 건축물이나 가로조성, 창조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지역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전략사업의 추진은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전략적 홍보방안은 대중매체,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상품의 연계 개발은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다양한 지역 상품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여 지역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림 6> 지역브랜드 강화전략

5. 시민참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조직구성과 운영

1) 시민참여 협의체 구성과 운영

(1) 협의체 구성

시민참여 협의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그룹 또는 단체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시민단체, 마을만들기의 전문성 기여를 위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적정인원 : 15 ~ 20인)하되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사업지구별로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갈등현안을 해결토록 한다.

<표 4>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시민참여 협의체 구성

구 분	구성원
직접적인 이해관계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 주택이나 상가 세입자 ■ 해당지자체의 공무원 ■ 마을만들기 계획·설계 용역업체 ■ 건설·시공업체 등
간접적인 이해관계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인정을 받는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등 전문가

시민참여 협의체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과 회의가 필요하며, 크게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 논의구조를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분과회의를 통해 잠정합의된 내용을 전체회의(타 분과회의와의 조율 등)를 통해서 최종결정하는 논의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민참여 협의체는 3단계의 논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해 분과회의의 의제를 분배하고 협의체 논의방향을 설정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과별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잠정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의제에 대해 주민참여 협의체 전체의 집중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표 5> 시민참여 협의체 주요 협의내용(예시)

전문 분야	주요 협의내용	
개발계획 방향 설정(1분과)	■ 기본계획의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컨셉 결정 ◦ 계획인구 및 기반시설 계획 결정 등
	■ 공공시설의 입지 및 규모 등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학교 등)의 위치 및 면적 결정 ◦ 도로의 선형 등에 대한 결정 등
	■ 마을만들기 구역의 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재척지와 편입지에 대한 조정 ◦ 양호한 건물의 활용방안 논의 등
주민갈등 조정(2분과)	■ 각 주체간의 갈등요소 도출	◦ 해당마을의 주요 갈등요소 도출
	■ 갈등해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창구 마련 ◦ 각 갈등유형 간 갈등해소방안 마련 등
기타 필요사항 (전체회의)	■ 마을만들기 추진일정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행정추진 일정 조정 ◦ 각종 건설추진 일정 조정 등
	■ 주민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공청회 등의 일정 조정 ◦ 주민 정보제공 및 주민의견수렴 등
	■ 기타 필요사항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민원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 기타 마을만들기 추진에서 나타나는 현안 등

(2) 협의체 운영

①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합의에 의한 다수결 의사결정방식으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도출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합의를 위해 지연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초 합의 사항을 확장해가면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운영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② 의견불일치 해소를 위한 방안

일반적으로 협의체 운영에서 의견불일치 현상은 먼저 가치관이 개입된 견해차에 의해 발생한 것, 두 번째로 사실관계 등에 대한 미확인 또는 정보부족의 원인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집중토론 방식을 동원하여 이견을 해소토록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연구·조사를 통하여 이견을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관계 확인과 정보공유의 경우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③ 분과회의와 전체회의의 유기적 결합

협의회는 주제별로 다양한 하위 쟁점들을 갖게 됨으로 각각의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과회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각 분과회의에서 잠정합의된 사항을 전체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타 분과회의와의 조율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협의체 구성원들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하며,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든 회의내용은 기록과 녹취의 방법을 통해서 협의회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⑤ 공동학습

마을만들기 과정이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정절차 및 관계법령 등 전문성에 기반하여 진행됨으로 역량 불균형과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시민참여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 과정에 전문가 참여에 의한 공동학습과 토론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역량불균형으로 인한 더딘 논의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논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⑥ 집중토론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동시다발적인 논의구조를 통한 합의방식으로 견해차이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결론도출이 어려운 경우,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당히 비중 있는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경우에 시간지체와 논의의 비생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다. 합의점 도출을 위한 최적 대안은 아이디어 회의(brainstorming)를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행정과 시민들, 지역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조직과의 유기적 협력과 연대관계 구축에 기초하여 설립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를 실천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규칙의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다양한 부처의 종합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수직적인 지자체의 업무구조를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조직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각 부서를 횡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 총괄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북구청 내에 설치된 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3대 운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을만들기 사업설계 및 디자인 지원, 지속·반복적인 강좌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리더 양성, 마을만들기 체험활동 및 마케팅 활동 전개,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일부 동단위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시민을 위한 취미교양, 사회교육 프로그램, 정보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여 주민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해가는 대표적인 기초생활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커뮤니티 차원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센터로 확대·개편할 수 있다. 물론 전문성이 담보된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 공동학습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참여와 각계 각층의 협력 및 연대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과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

시민교육은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과 시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도시를 계획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교육은 자연스런 상향식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지역의 문제를 시민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토대 마련에 도움을 준다. 성숙된 시민의식과 시민역량 강화는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주된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교육프로그램과 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다양한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은 물론 정체성 고취와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최근 시민교육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경기도 도시대학 시민교육프로그램은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2004년 도시이론 강의중심의 제1회 경기도 도시대학 프로그램과는 달리 2005년 제2회 경기도 도시대학 프로그램은 “살기 좋은 도시대안을 시민 스스로 제안하자”는 주제 아래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도시계획 스튜디오로 발전하였으며, 2007년에는 시민 스스로 도시와 마을을 이해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바꾸자”는 주제로 제4회 경기도 도시대학 프로그램이 개최³⁾되었다.

<표 6> 경기도 도시대학 시민교육프로그램 진행과정

주 제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 :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해질모루 10리길) ■ 부천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기러기 생태학교 만들기 ■ 용인 : 상현동 걷고싶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지란지교) ■ 이천 : 중리천 복원을 통한 부도심활성화 방안 ■ 화성 : 화성시 매화4리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소금꽃 피는 마을) 	1주	■ 입학식, 강좌소개, 경기도 지역현안 주제(대상지) 선정
	2주	■ 지역현안 주제(대상지)별 팀구성 및 대상지 현장 조사분석
	3주	■ 대상지 조사분석(자연, 인문, 관광환경 등)
	4주	■ 대상지 토지이용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5주	■ 대상지 시설물계획, 최종발표회 및 시상 졸업식
	6주	■ 우리나라 살기좋은 도시 및 마을 선진사례 답사

3) 2007년 도시대학은 경기도 10개 지역 31명의 시민단체들과 도시대학 교수진 10명(팀별 1명 지도교수, 1명 자문교수), 도시계획 스튜디오작업 도우미(팀별 3명)로 활동한 15명의 대학원생 등 총 56명이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총 56명의 참여인원들이 현실적으로 모두 참여 가능한 토요일에 오전 10시~12시까지 강의중심으로, 오후 1시~5시까지 팀별 실습과제진행과 결과발표 및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2007년 4월과 5월 총 6주 동안 진행됨, 경기도의 교육프로그램비용과 한국토지공사의 사례지역 답사비용 후원, 푸른경기21 도시분과의 시민단체 참여실무자 선정,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강의실, 기자재, 지도교수진 및 대학원생을 도우미로 제공하는 등의 공동노력으로 추진됨

교육내용은 강의교육, 현장조사, 대상지 팀별 도시계획 실습, 팀별 결과발표 및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지 팀별 현장조사와 토론·실습과정을 거쳐 작성된 결과물을 매주 발표하였다. 지도교수의 자문과 평가의 피드백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고 평가되었다. 최종발표회에서 평가된 최종결과물을 대상으로 우수대상지를 시상함은 물론 경기도 도시만들기 정책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주체들의 적극적인 동기유발을 부여하였다.

2007년 도시대학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에게 도시환경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발적 해결의지와 경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참여자(시민단체, 교수진, 대학원생) 모두에게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운동이 경기도에 자리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다. 특히 2007년 도시대학 프로그램은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운동의 가능성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되었으며, 졸업식에서 참여자 스스로 경기도시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데에 동의하여 경기시민도시네트워크 발족 준비모임을 구상하고 있다.



입학식 및 강좌개요



전체 강의 프로그램



팀별 실습프로그램



중간발표 및 평가



최종발표 및 평가



2007년 제4회 졸업식

<그림 7> 제4회 경기도 도시대학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과정

6. 결론

시민참여에 기초한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는 지방분권화시대에 근본적으로 지구환경의 보존뿐 아니라 도시화 과정에서 파괴된 정주환경의 개선과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마을만들기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사회의 가장 기초 마을단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시민환경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둘째, 마을만들기는 ‘시민참여 도시정책 수립과 관리계획’의 가장 실천적인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셋째, 마을만들기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지역활성화 수단으로서 시민 스스로 참여의 과정을 통해 친환경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의 순기능이 자연스럽게 정착하려면 지역시민, 지자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그리고 파트너십 형성에 의한 시민참여의 지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은 거주하는 마을의 자랑스러운 점, 문제점,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기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제이플러스 애드.
- 다무라 아키라, 2005, 마을만들기의 발상, 소화.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농촌계획의 이론과 실제, 보성각.
- 배웅규, 2001, 주민참여방법을 적용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7, 시화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희망 보고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이재준, 2007, 시민참여 도시개혁운동의 변화와 전망, 경사연 토론회자료.
- 이재준 외, 2005, 지역환경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환경부.
- 이재준 외, 2004, 마을의제21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연구, 환경부.
- 이재준 외, 2003,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8권, 제3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재준 외, 2002,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환경부.
- 정일훈, 2003, 환경친화적 도시 커뮤니티 환경 조성방안, 국토연구원.
- 주성수, 2004, NGO와 시민사회, 한양대출판부.
- 최병선·황희연, 2002, 21세기 도시정책 방향, 건설교통부.
- 최재순·이재준, 2000,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 만들기를 위한 커뮤니티 증진 방안 연구, 대한주

택공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06, 경기의제21 재적성 총괄보고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황희연 외, 2003, 시민참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서울특별시 의회.

渡辺俊一編著, 1999, 『市民参加のまちづくり』(マスタープランづくりの現場), 學藝出版社.

進士五十八, 1992, 『アメニテイ デザイン』, 東京:學藝出版社.

Healey, P., 1997, Collaborative Planning: Shaping Places in Fragmented Societies. Canada: UBC Press.

Lozano, E., 1990, Community design and the culture of cities. New York:Cambridge Univ. press.

Nick Wates, 2000, The Community Planning Handbook. Earthscan Publication Ltd.

OECD, 2001,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OECD(1998),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 Environmental Indicators.

UNCSD, 2001,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Guidelines and Methodologies.